

A Study about the Social Commemorial following National Disasters and Religious Educational Reflection

Jinho Ko^{*}
Dongguk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ligious-educational meanings and role of social commemorial following national disasters.

[Contents] This study first explored the occurrence of social death and how our society responds. In this study, social death is defined as unjust death and describes how our society responds to it. Next, the necessity and methodology of social commemorial were presented. In this study, I sought to describe the process of social commemorial as a process of mourning-memory-reflection, and to present the methodological perspective necessary for the importance of religious rituals in the level of mourning and the process of memory-reflection. Finally, I will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religious rituals) in the level of mourning and noted the need to explore new directions for the role of religion in social commemorial.

[Conclusions] This study sought to provide a critical view of the fact that the role of religion in social commemorial has been limited to extremely limited aspects such as religious rituals in the level of mourning. In addition, I will pointed out the fact that political mourning has been central to social commemorial following the national disasters and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political mourning in the conclusion. In this respect, this study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both aspects of religious mourning, centered on religious practice, and political mourning, centered on criticism and struggle, and suggests as a conclusion that the search for the direction of social commemorial at a new direction on the dimension of religious educational.

[Keywords] Social Commemorial, National Disatser, Social Death, Political Mourning, Religious Rituals

^{*} **Corresponding to** JinHo Ko (Emeritus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E-mail : kojinho@dgu.edu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국가적 재난에 따른 사회적 추모와 종교교육학적 성찰

고진호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 휴 애도상담 연구소장

요 약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국가적 재난에 따른 우리 사회의 사회적 추모에 대한 종교교육학적 의미와 역할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내용] 이 연구는 먼저 사회적 죽음의 발생과 우리 사회의 대응방식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죽음을 억울한 죽음으로 규정하고,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를 기술하였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추모의 필요성과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추모의 과정을 애도-기억-성찰의 과정으로 기술하고, 의례의 중요성, 기억-성찰의 과정에서 필요한 방법론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추모에 있어서 종교적 애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회적 추모에서의 종교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술하였다.

[결론] 이 연구는 사회적 추모에 있어서 종교적 역할이 종교적 의례와 같은 지극히 한정된 측면에 한정되어왔던 사실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사회의 국가적 재난에 따른 사회적 추모에서 정치적 애도가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정치적 애도의 한계점에 대한 지적도 결론에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종교적 관례중심의 종교적 애도와 비판과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애도의 두 측면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사회적 추모의 방향모색이 종교교육학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사회적 추모, 국가적 재난, 사회적 죽음, 정치적 애도, 종교적 의례

I. 서론

한국 사회는 최근 10.29 이태원 참사에서와 같은 불행한 국가적 재난을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국가적 재난은 ‘재앙’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할 정도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국가적 재난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재난의 원인이 제도적 미비에 있고, 따라서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재난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내포되어 있다. U. Beck(1983)의 『위험 사회론(Risk Society: Toward a new Modernity)』에서 지적과 같이 인류가 근대화 이후 직면하고 있는 재난은 천연재해 등에 의한 ‘위험(danger)’이 아니라, 제도적 미비에 의해 발생하는 ‘재난(risk)’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점에서 최근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재난의 책임도 국가 제도의 운영 주체인 국가에 있다고 보는 비판적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여론 중에는 국가적 재난의 원인이 된 국가(정부)의 무책임과 태만 등을 사회적 해악으로 보고 이를 국가 형 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Kim, 2019: 148).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참사는 ‘사회적 죽음’에 따른 희생자와 관련 피해자를 만들어낸다. 사회적 죽음의 당사자인 고인과 유족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희생자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적 재난 상황은 사회적 죽음의 희생자인 고인의 장례를 중심으로 ‘사회적 추모(commemoration)’가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기 마련이다. 사회적 죽음이 발생했을 때 희생자인 고인(故人)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추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적 추모는 고인의 천도(薦度)와 영생(永生)을 목적으로 하는 의례적 차원 이상의 의미로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추모를 사회적 죽음에 대한 애도와 함께 그 죽음이 ‘억울한 죽음’임을 밝히는 계기로 삼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적 재난에 따른 피해자인 유족과 관련 단체는 사회적 추모 과정을 참사 희생자들의 고통과 분노에 동참하는 과정인 동시에, 일종의 ‘자기 대결적 고행의 과정’(Yu, 2019: 94)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사회적 추모의 또 다른 경향은 특히 ‘정치적 애도(political mourning)’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애도는 국가(정부)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죽음에 대한 명확한 정치적 요청과 이를 둘러싼 집합행동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 점에서 국가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의미의 ‘사회적 애도’와도 의미상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정치적 애도는 일반적 의미의 사회적 애도와는 달리 ‘억울함’과 ‘부당함’과 같은 감정적 요인에 근거한 추모방식이다. 정치적 애도는 이 점에서 국가권력의 부당함에 저항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지의 표현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뿐만 아니라, 정치적 애도는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 따른 참사 발생 과정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을 권력적 차원에서 찾아내려고 하고 이를 다시 정치적 차원에서 복원하려고 하는 과정적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 죽음을 다시 ‘정치적 죽음’차원에서 재현하고, 지난 세월

호 ‘4.16 기억운동’의 전개 과정 등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사회적 추모의 전 과정을 사회적 죽음에 대한 기억의 공동체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Yu, 2019: 186).

국가적 재난에 따른 참사 시 유족과 같은 피해자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사건의 발생된 실제적인 진실(사건-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와 바람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가적 재난 사건의 진실이 은폐된 상태에서 추모 과정의 진행은 유족과 관련 피해자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적 추모는 과정적 차원(애도-기억-성찰)에서 애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애도의 좌절을 막는 정치·사회적 한계상황 극복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추모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도의 단계적 고착을 위한 대안모색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애도는 분노의 감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물론 이때의 분노는 ‘사회 정의(social justice)’ 실현을 위한 ‘거룩한 분노’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편으로는 사회적 갈등이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추모가 갈등 상황을 극복을 위한 ‘사회적 치유(Healing)’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종교의 역할 참여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국가적 재난에 따른 사회적 추모를 종교 교육적 차원에서 기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 먼저 이 논문에서는 국가적 참사에 따른 사회적 죽음의 발생과 우리 사회의 대응 방안(처리-해결 과정)과 관련된 두 가지 프레임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비교 분석적 논의는 사회적 치유의 방향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일종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논의와 연관하여 사회적 추모 과정의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치적 애도의 필요성과 보완점을 제시하고, 앞에서 언급된 사회적 추모의 과정에서 사회적 치유를 위한 방법론적 관점을 종교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사회적 죽음의 발생과 대응 방식

1. 사회적 죽음의 발생

한국 사회에서 최근 ‘사회적 죽음(social death)’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죽음은 자신의 개인적 과실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초래된 것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죽음¹⁾은 일종의 ‘억울한 죽음’으로서의 의미를

1) 최근 발생한 사회적 죽음으로는 159명의 희생자를 발생한 이태원 참사(2022년 10월 29일)가 있다. 이외에도 6.25 이후 최대 참사로 표현되는 세월호 참사(2014년 4월 16일)의 경우는 195명의 사망자와 9

지닌다. 사회적 죽음이 발생함에 따라 희생자를 위한 사회적 추모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최근에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최근의 상황은 일반시민들이 대중적 추모에 동참하여, 국가 제도에 의해 희생된 사회적 죽음이 단지 타인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과 동일한 차원에서 인식 공감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Lee, 2018, 12).

너의 잘못이 아니야. 2016년 5월 28일 9-4 승강장. 안전 문을 고치다 유명을 달리한 비정규 청년 노동자를 잊지 않겠습니다. 시민과 노동자가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겠습니다.
너는 나다.

앞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고 한 부분은 죽음의 원인이 국가적 제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너는 나다”라는 글의 내용은 사회적 죽음이 결코 타인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일반시민들의 사회적 죽음에 대한 동일체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적 재난에 따른 사회적 죽음에 대해 일반시민들의 이러한 자율적 의사 표현은 사회적 죽음에 대한 ‘재현’을 통해 국가적 제도의 미비점을 고발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사회적 죽음의 추모에 있어서 특히 사건발생 장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사건 현장의 ‘장소성(placeness)’(Seo & Ko, 2020: 2)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²⁾ 이러한 현상은 만일 추모의 공간이 사회적 죽음이 발생한 사건과 관계가 없는 곳에 조성될 경우 사회적 죽음이나 국가적 재난 사건을 애도,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가적 재난에 따른 참사 시 사회적 죽음을 추모하는 경우 참사가 일어난 죽음의 현장이나 상징적 장소-5호선 이태원 역사 주변, 강남역 10번 출구, 구의역 9-4 승강장, 기억의 교실-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건 발생의 일어난 곳을 중시하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한 결과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죽음에 대한 사회적 추모가 일시적 행사로 끝나지 않고, 기

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대형 참사로 인한 사회적 죽음 이외에도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사망한 20대 여성(2016년 05월 17일 새벽 1시)과 본문에서 관련 내용을 인용한바 있는 구의역 9-4 승강장의 스크린 도어에 끼어 사망한 사건(2016년 05월 28일 오후 5시 57분)이 발생하여 19세 근로자가 사회적 죽음의 희생자가 되었다.

- 2) 최근에는 장소성의 강조가 추모형식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사회적 추모의 초기(애도의 과정)에는 사회적 죽음이 발생한 사건의 현장에 일시적(수시)인 추모(temporal memorial)가 일어나고 있고 그 방식도 사건현장 중심의 로드사이드 메모리얼(roadside memorial)의 형식을 띠게 된다. 그러나 기억-성찰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사건의 의미를 내재한 일정한 장소-4.16 생명 안전공원-를 조성하여 사회적 추모가 진행된다. Lee(2018) 참조.

억-성찰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지와 인식의 결과로 보인다.

2. 사회적 죽음에 대한 대응

국가적 재난에 따른 사회적 죽음 발생 시 사회는 엄청난 혼돈과 충격에 빠지게 된다. 사회적 죽음이 발생한 그 순간과 시각은 필설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극도의 비참과 비탄이 교차하는 순간이다. 앞의 제1절에서 사회적 죽음의 장소성에 내재된 의미를 ‘기억-성찰’의 측면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적 죽음이 벌어진 시각의 참혹함을 돌이켜 볼 때 사건이 발생한 순간의 의미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죽음이 발생하는 사고의 순간을 한숨과 탄식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절대 절명의 순간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Hwang, 2022).

이태원 군중 참사는 우리의 숨을 멎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사가 발생한 그 시간 시각은 성령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카이로스(kairos)의 순간³⁾이다.

사회적 죽음이 문제는 유족이나 일반 시민들에게도 정신적 상흔(trauma)을 남기게 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 사회도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가(정부)차원의 외상치료를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외상치료가 사회적 죽음과 그에 따른 휴유증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대응 방식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적 재난에 따른 정신적 상흔은 사회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단순히 의료적 차원으로는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이와 같은 정신적 상흔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려는 사회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Ko, 2017).

국가적 재난에 따른 사회적 죽음의 발생 시 이에 대해 대응하는 두 가지 프레임이 있다. 먼저, 국가(정부)에서 통상적으로 제시하는 대응 방식이 의료 중심 프레임이다. 의료 중심 프레임의 핵심은 피해자의 심리적 치료에 중점을 두기 마련이다. 의료 중심 프레임에서는 국가 재난에 따른 피해자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⁴⁾자로 간주하

3) kairos의 순간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 혹은 평생 기억되는 개인적 경험의 순간을 의미한다. 이 순간은 주변은 정지되어있는 상태로 절대자만이 초월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kairos는 절대적인 시간 혹은 시계의 시간을 의미하는 chronos적 시간과는 상호 대비된다. <http://namu.wiki/w/카이로스>

4)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전쟁, 대참사, 재난 같은 충격적인 외상 사건을 경험한 이후 나타나는 장애를 의미한다. 1994년 미국에서 발간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IV(DSM-IV)에 수록된 PTSD 진단기준은 외상 사건 자체가 무엇이었는가? 보다는 그 사건과 관련하여 공포감이나, 두려움, 또는 무력

고, 치료를 사회적 추모의 중요한 과제로 본다. 의료 중심 프레임을 요약하면 ‘사고-보상-치료’의 과정으로 표기할 수 있다.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의료 프레임은 국가적 재난을 비교적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국가적 재난 시 국가가 통상적으로 채택하는 대응 방안중 하나가 의료 중심의 프레임이다. 그러나 의료 중심 프레임은 심리적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재난 상황을 수습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적 재난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과 국가적 책임을 방기하거나 도외시할 수 여지를 제공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⁵⁾.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의료 중심 프레임에 근거한 사회적 추모방식이 추진 될 경우 추모자체가 형식화, 관례화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사회적 추모의 과정인 ‘애도-기억-성찰’의 단계적 중요성이 갖는 사회적 의미도 간과되고 단기적 사태수습에 방점을 두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희생자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상황은 애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애도의 좌절’적 상황을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S. Freud는 애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신병적 우울증의 일종인 ‘멜랑콜리(melancholy)’를 앓게 된다고 보았다.⁶⁾ 이러한 우울증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점에서 애도의 좌절은 사회적 우울증으로 전화될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 중심 프레임이 일방적으로 적용될 경우 피해자인 유족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2차적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남기는 문제점을 유발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중심 프레임의 방법론적 대안으로 사회적 치유(사건-진실-치유) 중심의 프레임이 모색 제안된 바 있다(Kim, 2019: 148-149). 사회적 치유 중심의 프레임에서의 ‘치유(Healing)’는 국가적 재난 사건에서 규명과 진실의 과정(사건-진실)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감정 정치’가 개입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감정 정치는 본질적으로 국가적 재난 참사에 대한 고통의 감정에 공감하고, 국가(정부)의 무책임과 과실에 대한 정당한 ‘분노의 표출’을 의미한다. 사회적 치유 중심 프레임은 이 점에서 정

감에 대한 주관적 반응이 판단의 기준이다. 이러한 의료적 진단이 내포하는 문제는 장애의 원인을 인간의 심리적 무능력과 같은 내적 귀인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문화적(사회적) 요인에 대한 무지와 개인적 증상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서 한계점을 지닌다(Kim, 2015: 18).

- 5) 실제로 Post-세월호와 Post-이태원 참사 시 국가(정부)는 고통의 의료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치료 중심적 프레임을 통해서 사태를 수습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만일 의료적 접근만을 중점적으로 강조할 경우 사회적 추모의 근본 취지-유지(遺志)의 사회화(社會化)-가 무색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 6) S. Freud의 애도(Trauer)는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에서 오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견디어 내는 의식적 작업과 고통을 견디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이러한 점에서 애도는 비탄과 슬픔에 단순히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행동방식을 포함한다. Freud는 이러한 점에서 만일 애도의 좌절상태가 되면, 인간은 병리적 정신 상태인 멜랑콜리(Melancholie)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Kim, 2012: 60).

신적 상흔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치유 중심의 프레임에서는 정신적 상흔(trauma)의 근본적 발생 원인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사회적) 원인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Alexander, 2012).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치유의 프레임에서는 치유가 특히 문화적(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적 치유 중심의 프레임에서의 치유의 강조는 국가적 재난 사건의 진실을 사회적 차원에서 규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언급된 정치적 애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프레임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치유는 사회적 추모 과정에서 국가적 재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전제로서, 권력적 집단으로부터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사회적 치유 프레임의 경우 사회적 치유는 피해자 자신의 울분과 고통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정치적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만족감과 억압된 감정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III. 사회적 추모의 필요성과 방법론

1. 사회적 추모의 필요성

사회적 추모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죽음을 ‘애도-기억-성찰’을 위한 과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추모는 기억해야 할 가치 있는 사건에 대한 ‘성스러운 역사의 기록(register of sacred history)’으로 간주된다(Schwarz, 2014: 377). 아울러 사회적 추모가 재난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라는 의미에서 일종의 사회적 ‘경고로서의 기억(warning as a memory)’의 의미(Brown, 2013: 216)도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도 한다. 물론 사회적 추모의 의미에는 앞에서의 의미와는 달리 사회적 공헌 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모하고 기념하는 일종의 ‘추념’의 의미도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의 사회적 추모의 의미는 최근의 한국사회에서 목격할 수 있는 사회적 죽음 관련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의미한다.

사회적 추모는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집합 감정(collective emotion)’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의미는 추모에 있어서 감정과 같은 정서적 요소의 표출과 그에 대한 공감 과정이 사회적 추모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추모는 사회적 죽음과 피해에 따른 비탄과 고통의 감정이 개입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감정적 혹은 정서적 특징을 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때의 ‘감정(emotion)’은 단순한 느낌이나 걱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추모를 위한 집합 감정에서의 감정은 정서적 요인과 함께 인지적, 도덕적 측면이

함께 작동하는 종합적 의미를 띤다. 이러한 의미의 감정은 사회적 죽음이 발생한 국가적 재난 사건에 대해 판단하는 가치 판단적 인식 등이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추모에 내재된 정서적 감정요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기술할 수 있다 (Kim, 2019: 158).

첫째, 고인의 죽음이 희생자와 사회에 관련된 의미가 내포된 감정이어야 하며, 둘째 고인의 삶이 지속적으로 기억되고, 기념될 가치가 있는 의미를 지녀야 하고, 셋째 고인의 죽음에 나 자신이 직, 간접적으로 연루되고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함께 지녀야 한다.

사회적 추모에서 표출되는 집합 감정은 한편으로는 ‘의례(rituals)’를 통해서 구체화 된다. 의례는 사회 공동체가 정해놓은 규약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데, 사회적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공동체의 책임 의식을 보여주는 일종의 공적 표현이다. 의례는 공동체적 규범을 축약하고 있고, 상징적 방식으로 사회적 이상에 대한 추구를 보여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례는 사회적 추모를 구체화하는 사회 공동체에서 일종의 집합 감정 표현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추모에서 의례는 “애도-기억-성찰”의 단계 혹은 과정별 의례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적 추모의 이 세 단계에서 각각 필요한 의례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추모의 초기과정인 애도과정의 대표적인 의례는 ‘장례식(funeral)’을 들 수 있다. 장례는 사회적 죽음의 당사자인 고인의 주검을 영구히 안치하기 위한 과정이며,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추모 차원에서 치러지는 장중한 장례는 애도의 중심적 의례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사회적 추모의 두 번째 단계인 기억 의례는 사회적 사건이나 행위가 과거의 기록으로 오랫동안 기억 속에 보존케 하려는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기억 의례의 대표적인 예로는 추모 공간의 조성과 다양한 상징물로 구체화된다. 기억 의례는 시 공간적 차원에서의 추모 공간과 역사적 기록(물)을 통해 ‘기억의 영토화’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 예를 들어 ‘4.16 생명 안전공원’이나 ‘기억의 교실’과 같은 기억의 공간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와 미래에 공간적 물질적으로 재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억의 의례는 시간적 기억이 공간을 통한 보존의 과정이며, 과거의 사건을 오늘날 재현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Kim, 2021: 120-121). 기억 의례는 시간적 차원에서 재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의 뇌리에 오랫동안 그리고 효과적으로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⁷⁾ 특정한 장소를 배경으로 하는 추모 공간 조성이나 역

7) 이러한 점에서 국가적 재난과 참사에 따른 희생자들의 과거의 데이터를 보존, 전달하는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2020년 5월에 보도된 New York Times는 10만 명의 COVID-19 희생자를 내었을 때 이를 ‘계산할 수 없는 손실(An Incalculable Loss)’로 표현하기 위해 희생자의 인적 사항을 일일이 기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사회적 죽음의 희생자를 특별히 기억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자면 애도와 기억의 웹사이트 2022.09.11.)-<http://member2022ner/>-디지털 공간의 활용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Kim, 2022,

사적 기록물 이외에도, 기억에 동참의 의미를 내포하는 상징물로 나비표식의 추모 배지나 리본 등등의 표식이 사용되는 것은 기억 의례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추모의 세 번째 단계는 성찰 의례의 단계이다. 성찰은 과거의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활동을 포함한다. 성찰 의례는 국가적 재난 사건에 대한 시민 교육을 통해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사건 현장을 중심으로 4.16 기념 공원에서 조성된 민주 시민 교육관, 박물관을 통한 국가적 재난 사건에 대한 재인식의 과정을 홍보하고 교육하려는 실천적 활동이 필요하다. 성찰 의례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9.11 테러 추모 공간에서와 같이 사고 현장 중심에서의 추모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한 한 독일의 홀로코스트(holocaust) 추모에서와 같이 장소성이 강조되는 ‘거리의 학습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재난에 대한 의미 있는 성찰을 진행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2. 사회적 추모의 절차와 방법론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추모의 절차와 방법론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국가(정부)와 피해 당사자나 관련 단체 간 사회적 추모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사회적 추모를 희생자를 ‘애도’하는 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국가적 재난 사고 수습을 위한 전기로 삼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는 일정 기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추도 행사와 의례 중심의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정부)가 주관하는 사회적 추모초기의 애도 절차는 장례 중심으로 치르고, 이와 같은 장례에 종교단체들도 동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주관의 추도 의례에는 49재와 같은 불교의 천도 의식, 기독교의 장례 예배, 천주교 미사 등 공동 집전되는 것이 이러한 예이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의 애도 방식은 ‘추도(追悼)’로서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는 재난에 따른 피해보상과 의료 치료 차원에서 사태 수습의 실마리를 찾고, 이후 정기적 행사를 통해 사회적 죽음의 희생자를 기억·성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뜻한다. 국가(정부)가 주도하는 추도는 재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사죄, 문책과 징벌에 소극적이거나 혹은 유보적이다. 따라서 국가주관의 사회적 추모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 고인을 안치하기 위한 장례식과 관련 추모 행사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주관 추모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정기적 추도 행사⁸⁾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향

403-404).

8) 이러한 예로는 성수대교(1994년 10월 21), 삼풍백화점(1995년 6월 29일), 대구 지하철 사고(2003년 2월 18) 희생자 추모를 위한 정기적 추도 행사를 들 수 있다. 이 국가적 재난들은 한국사회의 대표적 대형

이 있다.

따라서 국가(정부) 주도의 사회적 추모(애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정부)의 사회적 추모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애도의 의미를 강조한다. 애도는 고통과 비탄 속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행동으로 전환 과정(고통-전환-행동)이라고 주장(Moon, 2015: 47-48)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추모는 애도의 정치적 차원과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정치적 애도(political mourning)’의 필요성의 논거이기도 하다. 사회적 추모를 정치적 애도의 차원에서 볼 때 애도는 단순히 유족과 피해자를 ‘지원’ 차원이 아니라 ‘권리회복’의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정치적 애도의 과정에서 유족들이나 관련 시민 단체는 사회적 죽음을 당한 희생자 추모를 위한 추모공원과 기념관 조성, 건립비 모금, 관련법 제정, 추모 관련 교육과 행사 개최 등을 국가(정부)에게 요구하게 된다.

IV. 사회적 추모의 종교 교육학적 성찰

1. 종교적 애도의 한계

국가적 재난 시 사회적 추모에 있어서 ‘정치적 애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논문에서 주로 언급하는 사회적 추모는 국가적 재난에 따른 ‘억울한 죽음’과 ‘희생’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원에서의 종교적 역할 참여를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동안 사회적 추모 과정에서 종교계의 역할은 주로 49재와 같은 천도 의식의 거행, 추모 미사나 기도회 개최 등과 같은 ‘종교적 의례(religious rituals)’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추모 시 의례 차원에서의 종교의 역할참여는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종교적 의례는 일정 부분 유족을 비롯한 일반 시민 피해자들의 비탄과 슬픔을 진정시키고 위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적 의례 활동을 통한 참여만으로 종교의 역할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적 역할의 한계적 상황은 사회적 추모가 정치적 애도 중심으로 전개되는 현실적 여건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종교계 내부로부터 국가적 재난 시대 사회적 역할참여에 대한 모색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⁹⁾

참사 사건이지만, 현재는 국가(정부)나 일반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적으로 멀어지고 있다.

9) 물론 종교계가 종교적 의례 이외에도 시국 활동 등에 참여한 바 있다. 예를 들자면, 국가적 재난(세월호 참사 관련)에 대한 기독교 교리 논쟁이나 5대 종단 평신도 주관 활동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종교적 역할은 교단 내에 한정되어 있거나, 평신도 참여 중심이라는 점에서 범 종교적 차원의 역할

사회적 추모에 있어서 종교적 역할 모색을 위해서는 사회적 추모가 희생자 영령(英靈)을 위한 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추모의 장은 단순한 추모(애도)의 차원을 넘어서 현실적으로 국가적 재난에 따른 비탄과 슬픔이 분출되는 ‘분노의 장’이 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된 추모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진실(사건-진실)에 기반한 정치적 애도가 방법론으로 강조되는 것도 이러한 점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추모 과정에서 국가적 재난과 참사의 책임자인 국가(정부)에 대한 유족과 시민들의 감정의 분출이 일정 부분 정당화 혹은 용인되기도 한다.

정치적 애도에서 추구하는 ‘진실’의 의미는 숨겨진 사건의 진상을 폭로(disclose)한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폭로에 따라 국가적 재난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벌’을 강조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회적 추모에서 정치적 애도의 관점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문책과 징벌의 과정이 불가피성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와 같은 진실의 의미를 사건-진실의 차원 아니라, 종교적 차원에서도 해석해보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교적 진실은 속죄, ‘참회’, ‘회개’와 같은 종교적 회심(回心)에 기초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종교적 진실은 자발성과 진정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정치적 애도와는 차이점이 있다. 물론 국가적 재난과 그에 따른 사회적 추모의 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속죄에 기초하는 자발성과 진정성을 기대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추모에 있어서 종교적 차원에서 추구하는 진실의 의미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사회적 추모에서의 종교적 역할

사회적 추모에서 속죄와 참회와 회개에 바탕을 둔 종교적 역할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물론 방법론적으로는 보완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방향에서의 역할 모색을 통해서 사회적 추모과정에서 종교의 정체성을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접근을 위해 먼저 종교적 역할을 ‘애도’의 단계에 일정한 역할에 한정해서 생각하는 인식으로부터 탈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는 사회적 추모과정에서 종교적 애도는 정치적 애도와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추모과정에서 종교적 차원의 ‘애도 과업(works of mourning)’이나 추모 역할과제를 설정하고, 정치적 애도 차원과는 다른 차원에서 유족과 관련 피해자의 분노와 고통을 덜어주려는 종교적 차원의 헌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적 재난에 대한 기독교 간 논쟁에 대해서는 Park, Oh(2014) 참조. “미안함과 분노를 넘어 행동으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5대 종단 평신도 주관의 기도회 관련은. 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4307[2023.04.15.] 참조

이러한 점에서 종교계는 고통과 슬픔의 사회적 추모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려는 의식이 필요하고, 공론의 장에서도 지속적인 종교적 차원의 ‘자기 목소리(voice)’를 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종교적 역할 참여를 애도의 과정에서 기억-성찰의 과정(Seo & Ko, 2020: 8-12)의 단계로까지 넓혀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종교적 역할은 정치적 애도 차원과 다른 역할 적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자면,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기억’은 과거 참사 당시의 슬픔과 분노를 오늘날 재현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적 기억은 과거의 참사를 재현하고, 이러한 한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겠다는 의지와 염원의 과정이다. 사회적 추모의 세 번째 단계인 성찰의 과정도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성찰의 의미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통해 유족과 일반시민들은 국가재난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와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자각하고 이를 혁파하기 위한 지속적 사회적 투쟁을 위한 동력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추모과정에서 종교적 참여방식은 정치적 역할과는 일정 부분 차이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추모에 있어서 희생자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관점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방법론적 과정에서는 일정부분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정치적 측면에서는 ‘기억’은 과거 타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잊지 않고 오늘날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재현’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한다. 이에 비해 종교적 ‘기억’은 참회와 회개를 위한 근본 조건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참회’와 ‘회개’는 “기억 속에 성령이 깃 든다”는 경구에서처럼 기억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교계는 기억의 영적 활동 프로젝트를 사회적 추모의 현장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추모의 단계에서 ‘성찰의 과정’에 대한 종교적 고려가 필요하다. 만일 기억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내재하는 성찰과 연계되지 않으면,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떠올린다는 의미의 ‘기억 명령(Knigge, 2010)’을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억의 명령은 피동적 기억을 의미한다. 기억의 명령은 관계적 기억이며, 이러한 차원에 고착되지 않기 위해서는 요청되는 것이 성찰이다. 성찰을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할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적 재난의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구조적 통찰적 인식을 의미한다. 정치적 성찰 이점에서 사회적 투쟁의 필요성과 그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정치적 성찰과 달리 종교적 성찰의 과정은 사회적 죽음에 대한 영적 의미 부여에 기반하고 있다. 정치적 성찰은 국가적 재난의 희생자를 피해자 중심 차원에서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지만, 종교적 성찰은 희생자들의 남긴 유지(遺志)를 영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도록 한다. 사회적 추모에서의 종교적 역할의 초점은 앞에서 언급한 종교적 기억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사회와 공동체 구성원들을 자기 성화(self-sanctification)¹⁰⁾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10) 성화(sanctification) 라틴어(Sanctus)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거룩해짐, 거룩하게 된다는 뜻을 지니는 신

데 있다.

3. 사회적 치유의 종교적 차원

사회적 추모의 목적은 ‘사회적 치유(Healing)’에 있다. 사회적 치유는 사회성(sociality)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개인적 치유(healing)와는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사회적 치유가 종교적 차원에서 논의되기보다 주로 정치적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도 사회성을 띠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회적 치유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건-진실-치유 프레임’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다(Kim, 2019, 148).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치유는 공동체적 집합감정(emotion)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사회적 치유는 국가적 재난과 그에 따른 참사가 발생한 책임 당사자를 국가(정부)로 보고, 이들을 향한 대립과 저항과 같은 행동적 실천을 전제로 한다.

사회적 치유는 국가적 재난에 따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있는데, 이때의 진실은 책임회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숨겨져 있는 것, 은폐된 것을 드러내어 ‘폭로(disclose)’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사회적 치유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와 그것이 사회적으로 구현 상태와 연관되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사회적 치유에 내재된 정치적 맥락이나 사회성을 감안하더라도, 치유는 사건-진실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치유는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가능한 상태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치유를 종교적 측면에서 보면, ‘참회와 회개’를 통한 속죄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용서와 화해는 내면적 인간의 양심의 문제이자 종교성(영성)격을 띠고 있다. 물론 용서와 화해의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적 재난 책임자의 속죄(贖罪)의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만일 사회적 치유가 만일 종교적 차원에서 보완이 가능하다면, 사회적 추모는 대립과 투쟁의 차원에서 해원(解冤)과 상생(相生)의 차원으로까지 나아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먼저 사회적 추모 과정에서 종교적 역할이 사회적 죽음의 희생자나 유족 그리고 시민 중심적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사회적 추모 과정에서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교적 역할은 관례적인 차원을 답습해오고 있고, 사회적 추모가 시민을 중심으로 한 대중적 추모의 형식으로 전개되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사회적 추모는 굳이 정치적 애도의 차원에서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가적(정부) 영역 중심적 관행에서 탈피하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중적 추모의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 사회적 추모의 현장에서 사회적 죽음을 추모하기 위한 행동적 실천양식과 다양한 상징과 개인적 기록이 존재

학적 용어이다. 그러므로 성화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 요인으로서 성령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대부분의 기독교 교단에서는 성화를 강조하지만, 그 강조점에는 차이가 있다. [http:// enwikipedia.org/sanctification](http://en.wikipedia.org/sanctification)[2023.04.19.] 참조

한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적 추모의 변화에 따른 종교적 역할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추모 과정에서 종교적 역할이 과거와 같이 종교계 중심의 수직 하향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관례와 습속을 지양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직 하향적 차원에서의 종교적 역할은 사회적 추모의 중심이 사회적 죽음을 당한 희생자나 유족들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배려나 이해의 차원보다는, 단지 국가적 재난의 발생과 사회적 죽음에 대한 종교적 의례의 시행과 같은 관례적 종교적 활동 자체를 우선하는 경향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추모를 애도-기억-성찰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종교적 역할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관련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결론

사회적 추모에 있어서 종교적 역할은 의례 중심의 지극히 제한된 차원에서만 진행되어오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적 재난에 따른 사회적 추모에 있어서 종교적 역할참여나 기대역할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 추모 과정에서 정치적 애도가 강조되는 것과는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추모 과정에서 정치적 애도의 강조는 먼저 국가적 재난의 진실을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 처벌하는 과정이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가적 재난의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권리회복과 심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정치적 애도는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의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죽음의 당사자와 유족들의 억울함을 효과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특징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추모 과정에서 정치적 애도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계점도 지니고 있다. 정치적 애도는 대립과 투쟁을 기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애도에서 대립과 투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과정들이 사회적 추모의 궁극적 목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추모에 있어서 종교적 역할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애도는 국가적 재난 사건에 대한 진실(사건-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에 문책과 처벌이 수반된다. 사회적 추모의 진정한 목적이 사회적 치유(Healing)에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종교적 역할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정치적 애도에서 주장하는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의 과정만을 가지고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치유를 달성하기 어렵고, 참회와 속죄, 용서와 화해를 위한 종교적 역할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추모에 있어서 종교적 애도 차원에만 역할을 한정해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도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 추모 과정에서 종교적 역할을 단순히 종교적 애도 차원에

집중하고 있는 관례적 사고방식은 종교에 부여된 역할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추모 과정에 있어서 종교적 정체성의 상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추모 과정에서 종교적 역할을 애도의 과정 이외에도 기억과 성찰의 차원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고, 매 과정에서 종교적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실천적 프로젝트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재난에 따른 사회적 죽음을 애도-기억-성찰하려는 종교적 차원의 노력과 시도를 통해서 사회적 추모에서 목표로 하는 사회적 치유를 온전하게 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 Alexander, J. C. (2012). *Trauma A Social Theory*. Cambridge Polity Press.
- Beck, U. Risikogesellschaft :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홍성태 옮김(1997).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를 향하여. 서울: 새물결.
- Brown. K. (2013). Commemoration as Symbolic Reparation: New Narrative or Spaces of Conflict. *Human Rights Review*, 14(3), 273-289.
- Choi Ho. K. (2006). Spatial Representative Memorial Museums in Germany. Israel, and U.S. America. KRF-2006-321-A00299.
- Freud, S. *Trauer and Melancholie*. 임진수 옮김 (2013). 애도와 멜랑콜리, 서울: 파워북.
- Hong, S. K. (2019). Persistence Commemoration and Social Participation of Disaster.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10(6), 1841-1855.
- Hwang, S. Y. (2022). Silent Sighs, Silent Moan. *Christian Thought*, 768, 12-13.
- Kim, M. H. (2015). Healing after Sewohho: J. Alexander's Perspective on the Trauma Process. *The Korean Journal of Cultural Sociology, KJCS*, 9. 11-53.
- Kim, M. Hee. (2019). "Emotional Politics of Disaster and Sociology of Commemoration: For Social healing beyond and the Medicalization of Emotion. *Emotion Studies*, 19, 145-178.
- Kim, M. J. (2022). A Study on Ways to Visulaize Data for Memorial. *Korea Institute of Design Research Society*, 7(4), 401-411.
- Kim, S. (2017). Hazwon Sangsaeng and the Theory of Desire in Psychoanalysis a Comparison Focused on Mourning.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28, 73-102.
- Kim, S. (2021). Spatial Meaning of 4.16 Life-Safety Park. *The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ocial Ethics* 50, 101-134.
- Knigge, V. & Frei, N. (2002). *Verbrechen erinnern : Die Auseinandersetzung mit Holocaust und*

- Völkermord*, München: Beck.
- Ko, Y. S. (2017). A Study on Trauma Symbol for the Care of Social Trauma. *The Journal of Pasrol Care and Counselling*, 21, 7-39.
- Lee, Y. H. (2018). Temporary Memories in Korea and Folk Religion: Focusing on the Cases of Gangnam and Gui St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78(3), 9-36.
- Malpas, J. *Place and Experience: A Philosophical Topology*. 김지혜 옮김 (2014). 장소와 경험: 철학적 지형학, 서울: 에코리브르.
- Moon, H. J. (2015). Affect in the Age of Disaster-Possibility and Impossibility of Mourning. *Feminism and Korean Literature*, 35, 41-67.
- Park, J. W. & Oh, S. (2016). Conflicts about Role of Religion in the Public Sphere of Korean Society: Pros and Cons in Christian Churches about the Sewohl Ferry Disaster. *Korean Journal of Social Theory*, 49, 133-165.
- Schwarz, B. (1982). The Social Contexts of Commemoration: A Study in Collective Memory. *Social forces*, 61(2), 374-402.
- Seo, J. S. & Ko, J. H. (2020). The Study of the Environmental Design of Memorial Space and Implementing Project of Death Education. *The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63, 1-18.
- Yi, H. K. (2018). Eine neue Tendenz in der Holocaust-Erinnerungskultur in Deutschland-Eine Untersuchung zum Stolp zum Stolpersteing-Projekt. *Dogil Munhak*, 46, 120-147.
- Yu, H. J. (2020). A Study on the social sigma of 'befitting the bereaved' and strategies for the response: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the parents of the victim of Sewol Ferry Disaster from Danwon High School and Social Healing. *Civil Society and NGO*, 18, 151-189.